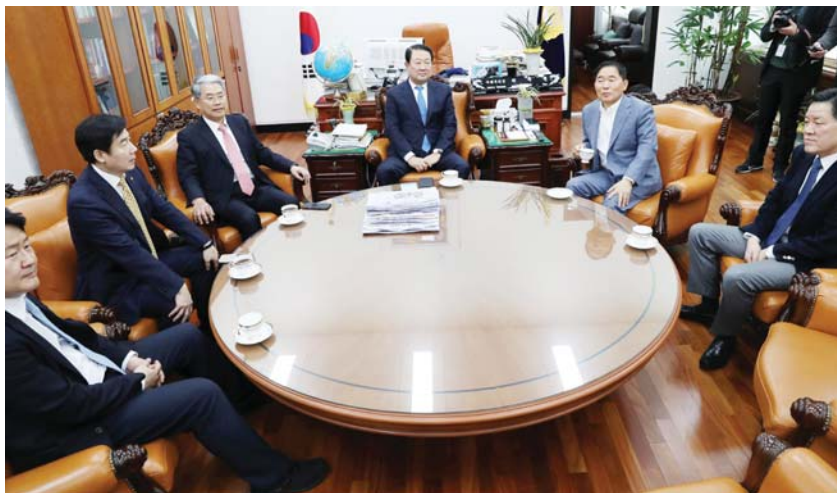


# “安 측, 통합과정 정상적이지 않아”



국회 부의장인 국민의당 박주선 의원과 김동철 원내대표 등 통합 중재파 의원들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부의장실에서 회동을 갖고 있다. 왼쪽부터 송기석 의원, 이용호 정책위의장, 김동철 원내대표, 박주선 부의장, 황주홍, 주승용 의원.

당내 중재파로 분류되는 이용호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은 1일 안철수 대표 측이 당헌 개정을 통해 '전당대회 우회' 방식의 통합 추진을 강행하는 데 대해 "지금 통합 과정이 정상적이지 않은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한 뒤 "이런 식으로 통합을, 한두 번도 아니고 여러 차례 당헌당규를 바꿔서 계속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 국민의당 중재파 이용호 “국민에 우러서러워” “시간 더 필요...민주평화당 창당도 지켜봐야”

속한다는 것이 국민들에게 어떻게 비칠까 하는 부분이 우려스럽다"고 했다. 그는 또 안 대표가 전당대회 전 사퇴, 전당대회 직후 사퇴 등 중재안을 모두 수용하지 않다가 2·13 통합 전당대회 후 조건부 사퇴를 제시한 데 대해 "안 대표가 (사퇴) 시점을 늦추고 늦추는 게 우리 진정성을 훼손한 게 아닌가. 그런 부분에서 기분이 썩 좋진 않다"고 거듭 불쾌감을 드러냈다. 그는 다만 민주평화당 창당과 합류 여부에 대해서는 "내가 보기에 최선의 방안, 최선의 카드는 없어졌고 차선만 남았다. 차선도 아니고 차차선이 남았는데 그걸 선택하는 데 주저가 된다"고 거리를 뒀다.

이 의장은 아울러 "민주평화당도 이쪽(안 대표 측)이 최종적으로 통합을 결정하는 건 11일이다. 그걸 보고 창당을 해야 명분이 있는 게 아닌가"라고 했다. 이 의장을 비롯해 당내 중재파인 박주선 국회부의장, 김동철 원내대표, 주승용 전 원내대표, 황주홍 의원은 이날 여의도 한 식당에서 오찬 회동을 갖고 향후 거취를 논의해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 의장은 다만 "(거취 결정을 더 고려할) 그럴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며 "민주평화당 측은 오는 6일 예정대로 창당대회를 한다고 한다. 그런 걸 또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다"고 했다.

뉴시스



지난 2015년 11월 22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 김영삼 전 대통령 빈소를 찾은 이명박 전 대통령과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인사를 나누던 모습.

## 文 대통령-MB, 2년3개월 만에 만난다

문재인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MB)이 평창에서 만날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통령은 31일 오후 2시 집무실에서 한병도 정부수석 이 예방해 전달한 평창올림픽 초청장을 받으면서 '참가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참석 의사를 밝혔다. 한 수석은 '이 전 대통령이 참석하겠다고 응답을 했는가'라는 질문에 "그렇다. 올림픽에 참석하겠다고 응답했다"고 말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한 수석에게 직접 초청장을 전달하라고 지시

과 만나 '전직 대통령에게도 명절 선물이 가느냐'는 물음에 "모든 기준은 전직 대통령 예우에 따라 진행된다"고 이 전 대통령만 대상자임을 밝혔다. 청와대는 올림픽 개최지 강원 평창 감자로 빛은 진통주 '평창 서주(馨酉)', 경기 포천 감정, 경남 의령 유과, 전남 담양 약과, 충남 서산 편강 등 지역 특산물로 설 선물을 구성했다. 진통주는 문 대통령의 제안으로 포함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 전두환 전 대통령, 노태우 전 대통령은 전

## 박근혜·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전직 대통령 예우일어 文 대통령·MB, 김영삼 대통령 장례 이후 27개월만에 대면

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예정대로 MB가 평창올림픽 개최식에 참석할 경우 문 대통령과 이 전 대통령은 지난 2015년 11월 김영삼 대통령 빈소에서 조우한 이후 2년 3개월 만에 평창에서 만나게 된다. 현 정부와 이 전 대통령 측이 검찰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사를 두고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에서 주목할만한 장면이다. 이 전 대통령은 문 대통령 내외가 보내는 명절 선물도 유일하게 받는 전직 대통령이기도 하다. 이번 설 선물은 조만간 배송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청와대 설 선물 브리핑을 마치고 기자들

직 대통령 예우를 받을 수 없어 현직 대통령이 예우와 존중을 담아 보내는 청와대 명절 선물뿐 아니라 올림픽 초청 대상에서도 제외됐다. 박 전 대통령은 탄핵 소추안 인용 전 전 대통령과 노 전 대통령은 징역형을 선고받아 전직 대통령 예우 자격을 잃었다.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권리의 정지 및 제외 등) 2항에는 '재직 중 탄핵결정을 받아 퇴임한 경우', '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등 2가지 경우에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뉴시스

## 유승민 “선거연령 하향 한국당만 반대”

“이들 전 김성태 하향 앞장 공언... 장난 치는 것 아닌가”

유승민 바른정당 대표는 1일 "어제(1월31일)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위 정책위가 열렸고 여에서 선거연령 18세 하향에 대해서 모든 정당이 적극 찬성했는데 자유한국당만 반대했다"고 밝혔다. 유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 "불과 이틀 전 한국당 연찬회에서 김성태 원내대표는 선거연령 하향이 이뤄질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공언을 했는데 특위에 참석한 한국당 의원들은 고등학생의 정치적 판단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반대를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거야말로 한국당이 장난을 치는 것 아닌가"라며 "이 집에 대해서 한국당이 분명히 입장을 정리해달라"고 촉구했다. 백악관이 차기 주한 미국 대사로 내정됐던 빅터 차 전한국재문 제연구소 한국 석좌 지명을 철회한 것과 관련해서도 유 대표는 "이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북핵 미사일에 어떻게 대응할 것

인지지를 예고하는 사건"이라며 "빅터 차는 대북 정책에 관련한 매개로 알려진 인물인데 이런 사람 조차 트럼프가 반대했다면 그 의미에 대해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한민국은 전쟁을 방지하고 북핵을 제거하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추진해야 하는데 이는 모두 한미동맹과 한미 간의 신뢰가 전제돼야 가능한 일"이라며 "문재인 정부가 북한에 대화를 구걸하는 와중에 과연 한미동맹은 문제없이 잘 관리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유 대표는 "한반도의 전쟁은 북한이 시작할 수도 있고 미국이 시작할 수도 있다. 미국이 시작하는 전쟁을 막는 방법은 한미동맹과 설득 뿐"이라며 "민약 문제가 정부가 이것을 제대로 못하면 미국은 대한민국을 패싱하고 북한을 공격하는 새로운 코리아 패싱이 나타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시스

## 유원식 “사회적 연대추 구성 위해 5당 원내대표 회의하자”

유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월 임시국회에서 개헌안, 평창 성공 결의안,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국회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법 등 현안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국회만큼 큰 민생 개혁과제 실현에 집중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방법론에 차이가 있을 수 있어도 대한민국이 총체적 위기에 놓여 있음은 각당도 공감할 것"이라며 "이제 말이 아니라 과감한 행동에 나서야 한다. 당장 시급한 현안 처리를 위해 여야가 뜻을 모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 원내대표는 공정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7대 입법, 산업안전보건법, 권력기관 개혁안, 공수처법 필요성을 재차 강조한 뒤 "2월 임시국회에서 관련법 통과를 위해 여야가 협력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는 개헌과 관련해서도 "정치권이 국민에게 약속한 개헌시간 준수를 위해 여야 모두 조속히 개헌안 마련에 나서야 한다"며 "우리 당은 오늘 개헌의총 통해 개헌 당론 모어나갈 예정이다. 야당도 속도내줄 것을 당부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평창동계올림픽 성공을 위해 국회 차원의 결의안도 시급히 처리 돼야 한다"며 1988년 당시에도 광주 청문회, 5공비리 청문회라는 현안이 있음에도 정쟁 중단 사례가 있는 만큼 개혁이 이전 결의안 처리할 수 있도록 야당 협조를 촉구한다"고 일바랐다. 유 원내대표는 "사회적 연대 위원회 구성을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한다"며 "사회적연대위 구성 관련 논의를 위해 조속한 시일 내에 5당 원내대표 회의 하자는 제안을 다시 드린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회 혁신도 절실하다. 법사위 개혁은 일하는 국회, 성과 내는 국회를 만들기 위한 최우선 과제"라며 "오는 7일 개최 예정인 운영위에 개정안을 상정해야 한다. 야당의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그는 시민의회 제안 검토도 주문했다. 유 원내대표는 포스코, LG디스플레이, 아시아나항공 등 대기업 납품 협력업체를 비롯한 노동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최저임금 인상 무력화 시도를 언급한 뒤 "근로기준법 위반 접수 사례를 철저히 검증해서 조치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뉴시스

**야호센터는**  
**인문-예술-사회참여로**  
**청소년-지역주민과 함께합니다.**

**야호의 꿈**

청소년이 지금 행복한 삶  
 청소년이 사유하는 삶  
 청소년이 예술을 향유하는 삶  
 청소년이 마을을 사랑하는 삶  
 마을 주민들이 세계시민이 되는 삶  
 마을 주민들이 삶을 위한 공부를 하는 삶  
 마을 주민들이 스스로, 더불어 살아가는 삶

**야호는 청소년의 외침이다.**

062-960-6980  
광산구 시암로 340번안길 5

Drawing 이호동

**광산구**